

인천 경제산업 ISSUE&TREND

제24-19호 (2024.10.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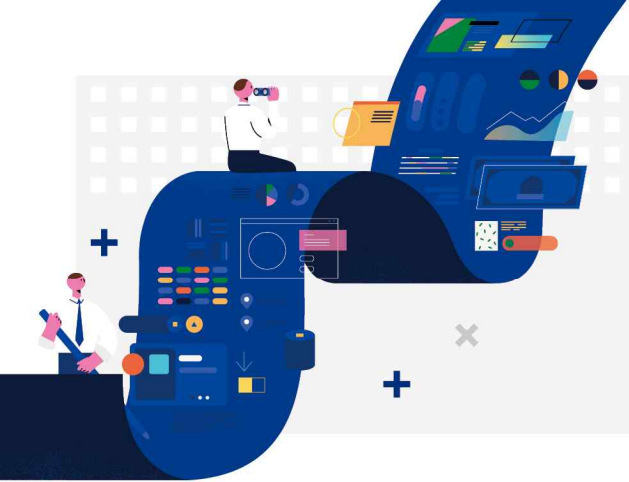
■ 이 슈

(노동)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
안전관리자 수급 및 중소기업 지원 현황

■ 주요 산업 현황

(제조) 자동차산업 시장 동향

■ 국내 정책동향



인천 경제산업 ISSUE&TREND

제24-19호 (2024.10.11)

Cotents

I. 이 슈

(노동)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 안전관리자 수급 및 중소기업 지원 현황 · 1

II. 주요 산업 현황

(제조) 자동차산업 시장 동향 7

(부록) 주요 산업 경기지표 10

III. 국내 정책동향

(금융) '금융상품 한눈에' 사이트, 개인사업자 대출상품 비교 시작 예정 11

(노동) 10월 7일부터 2주간,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신청·접수 11

(산업) 정부, '넷제로 챌린지X'로 탄소중립 혁신기술 스타트업 발굴 추진 12

(금융) 청약통장 금리·소득공제 납입 한도 상향, 상품 전환 등 혜택 확대 12

(보건) '나의건강기록' 앱, 14세 미만 자녀 건강기록 등 추가 서비스 확대 13

(복지) 복지부, 임신·출산을 위한 건강보험 지원 강화 13

(산업) 정부,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에 3년간 10조 원 투입 14

(경제) 환경부, 탄소중립포인트제 전용 모바일 앱 '카본페이' 출시 14

연구진

- | | |
|------------|---------------------------|
| 최태림 | 인천연구원 인천경제동향분석센터 센터장 |
| 민규량 | 인천연구원 경제환경연구부 연구위원 |
| 상민경 | 인천연구원 인천경제동향분석센터 연구원 |
| 황인영 |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인력수급 분석센터 부연구위원 |

노동 >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 안전관리자 수급 및 중소기업 지원 현황 +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확대 #안전관리자 양성교육 #산업안전대진단 #공동안전관리자 지원사업

- 기업에서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하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22.01)」이 2024년 1월 27일부터 50인 미만(5~49명) 사업장에도 확대 시행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은 국내 산업현장의 미흡한 안전보건관리체계로 인하여 산업·시민재해가 지속¹⁾되고 사망사고비율이 OECD 평균을 웃도는 상황²⁾을 타개하기 위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중대재해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제정³⁾
 - 동 법률은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중대한 산업재해와 시민재해⁴⁾를 예방하고, 종사자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의 보호를 목적으로 종업원 5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2022년부터 시행되었으며, 종업원 수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3년간 적용을 유예하여 2024년 첫 시행
 -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에 종사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해당 의무 위반으로 인해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함으로써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조치 요구
 - 동 법에서는 자신의 사업을 영위하거나 타인의 노무 제공을 통해 사업을 하는 ‘사업주’뿐만 아니라 사업을 대표·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이나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인 ‘경영책임자등’에게도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부과⁵⁾
 -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는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확보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 점검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시정조치를 포함
 - 동 법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에는 구체적으로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등 전문인력 배치가

1) △00화력발전소 압사사고(‘18.12) △ 00물류창고 건설현장 화재사고(‘20.04) △00중공업 아르곤 가스 질식 사고(‘20.05) 등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사고와 더불어 △가습기 살균제 사건(‘11.11) △세월호 사건(‘14.04) 등 시민재해 사망사고 발생이 지속되며 사회적 문제로 지적.

2) 산업안전보건연구원(2023)에 따르면 우리나라 사망사고 만인율은 8년째 0.4~0.5‰대 수준(2021년 기준)으로 OECD 평균인 0.29‰를 웃돌고 있으며, OECD 38개국 중 34위로 영국의 1970년대, 독일·일본의 1990년대 수준.

3) 대한산업안전협회(2022).

4) 중대산업재해란 △사망자 1명 이상 발생 △동일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발생 △직업성 질병자가 1년 내 3명 이상 발생 등의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하며, 중대시민재해는 △사망자 1명 이상 발생 △동일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10명 이상 발생 △동일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 10명 이상 발생 등의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

5)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 공공기관의 장도 해당(고용노동부, 2021). 사업주·법인·기관이 제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하고 해당 기관이 그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한 실질적인 지배·운영·관리 책임이 있는 경우 마찬가지로 관계 법령에 따른 관리상 조치의 의무가 부과.

포함되어 있으며, 배치해야 하는 인력이 다른 업무를 겸직하는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안전 또는 보건에 관한 업무 수행시간 보장이 필요

- 안전보건 전담조직 설치와 전문인력배치의 경우 50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제외되지만, △제조업 △임업 △하수·폐수 및 분뇨처리업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및 원료재생업 △환경 정화 및 복원업 등 5개 업종의 상시근로자 20~49인 사업장의 경우에는 안전보건관리담당자 배치 필요⁶⁾
- '24년 1월 말, 동 법이 유예기간 종료로 전면 시행됨에 따라 국내 산업재해 사망자 수의 약 75%를 차지하는 5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 등 중소·영세기업가를 대상으로 안전관리자 등 필요 인력 확보를 지원할 수 있는 대비책 마련이 필요
- 「중대재해처벌법」은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예산 등 사업장 내 적절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나 소규모 사업장은 여건상 이를 소홀히 하기 쉬운 상황
- 한국경영자총협회의 실태조사(2024)에 따르면 설문 대상기업 중 약 77%가 「중대재해처벌법」 의무를 준수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관련 의무 준수가 어려운 이유로는 '전문인력 없이 사업주(현장소장) 혼자 안전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응답이 전체의 47%로 가장 높게 조사
- 중소기업중앙회의 실태조사(2023)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맞춰 의무사항 준수가 불가능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40.8%로, 해당 법의 의무 사항 중 50인 미만 기업에 가장 부담이 되는 사항은 △안전보건 전문인력 배치(24.4%) △안전보건 관련 예산 및 편성 및 집행(15.2%) 순인 것으로 확인

[표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조 제6호에 따른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등 전문인력 배치

항 목	
•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법적 요건 이상으로 배치했다.	
•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업무 수행시간을 보장하고 있다.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 업무 담당자 배치기준 등	
구 분	적용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제15조)	• △(건설) 20억 원↑ △(제조) 50인↑ △(서비스업 등) 300인↑ △(기타) 100인↑
관리감독자 (제16조)	• 5인↑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제62조)	• (건설) 관계수급인 공사 금액을 포함한 20억 원↑ • (제조 등) 관계수급인 근로자를 포함한 100인↑ *선박 및 보트 건조업, 1차 금속 제조업 및 토사석 광업은 50인↑
안전관리자 (제17조)	• △(건설) 50억 원↑ △(제조 등) 50인↑ △(부동산, 사진처리업) 100인↑
보건관리자 (제18조)	• (건설) 800억 원↑ * 토목공사는 1,000억 원↑ • (제조 등) 50인↑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제19조)	• (제조, 임업, 하수폐수 및 분뇨처리 등) 20~49인
산업보건의 (제22조)	•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8조에 따라 선임의무 면제

* 자료 : 법무법인 광장(2024) 참고 및 재작성

6) 중소기업중앙회(2023)의 조사에 따르면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정한 의무사항 중 중소기업의 부담이 가장 큰 의무사항으로는 1순위(20.8%)와 1+2순위(32.8%) 모두 '안전보건 전문인력 배치'인 것으로 조사.
7)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2024)에 따르면 기업규모별 업무상사고 사망재해 비율은 5~49인(44.2%) 및 4인 미만(32.2%) 등 50인 미만 기업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전체 업무상사고 사망재해의 약 75% 수준인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고용노동부의 '22년 기준 업무상사고 사망만인율(근로자 10,000명당 발생하는 업무상사고 사망자수 비율) 통계에 따르면 사업장 규모가 작을수록 사망만인율도 증가.



* 자료 : 고용노동부(2023), 이민형(2023) 참고 및 재구성

[그림 1] 2022년 기준 업무상사고 사망만인율

- 「중대재해처벌법」의 시행으로 기업의 안전관리자 채용이 의무화되고, 「산업안전보건법」이 사업주·사업장의 안전관리 노력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개정이 지속됨에 따라 산업현장에서의 안전관리자 수요 증가
 - 법령 확대 시행에 따라 안전관리자 의무 채용 대상 사업장이 증가하였으며, 특히 건설업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개정⁸⁾에 따라 안전관리자 선임 대상 사업의 기준이 종전 공사 금액 120억 원(토목공사 150억 원) 이상 사업에서 '23년 50억 원 이상 사업으로 범위가 확대되어 안전관리자 수요가 증가할 전망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기업은 본사의 안전보건 전담 조직을 구축할 뿐만 아니라 현장의 안전관리자도 법적 기준 이상으로 배치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으로, 특히 중소 건설기업의 경우 신규인력 확보 역량이 상대적으로 부족하여 안전관리자 선임 대상 범위 확대에 따른 구인 애로가 클 것으로 예상⁹⁾

[표 2]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정의 및 역할

구분	정의 및 주요 내용
정의	• (제17조제1항)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해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조언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자격	• (시행령 제17조) △산업안전지도사 △산업안전기사(산업안전, 건설안전) △산업안전관련 학위 소지자 △관련 대학 졸업 후 관리감독자 업무 경력자(3년, 이공계 1년, 고교졸업자 5년)이면서 관련 시험합격자 등
선임 규정 및 업무 위탁	• (시행령 [별표 3]) 업종에 따라 ①상시근로자 50명 이상 500명 미만은 1명 이상 ②500명 이상은 2명 이상을 선임 • (시행령 제16조제2항) 상시근로자 300명 미만 사업장(건설업은 공사금액 120억원 미만)은 안전관리 전문 기관에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위탁 가능
업무	• (시행령 제18조) ①관리감독자가 지휘·감독하는 작업과 관련된 기계·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보건 점검 및 이상 유무의 확인 ②관리감독자에게 소속된 근로자의 작업복·보호구 및 방호장치의 점검과 착용·사용에 관한 교육·지도 ③해당 작업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에 관한 보고 및 이에 대한 응급조치 ④해당 작업의 작업장 정리·정돈 및 통로 확보에 대한 확인·감독 ⑤위험성평가 참여 등

* 자료 : 한국산업안전보건연구원(2023) 참고 및 재작성

8) '19년 12월 24일 개정, '20년 1월 16일 시행 개정안. 법령 개정에 따른 산업현장 총격완화를 위해 공사규모별 단계적으로 적용하며, 공사 규모 100억 원 이상('20.07.01)→80억 원 이상('21.07.01)→60억 원 이상('22.07.01)→50억 원 이상('23.07.01) 시행 적용.
9) 건설산업연구원(2022)에 따르면, 건설업의 경우 공사 금액 50~80억 원 규모의 공사 현장에 한정하더라도 '23년까지 약 3,914명의 안전 관련 인력이 필요할 것으로 예측.

-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이 되는 관련 자격증 취득자 수는 안전관리자 의무 선임사업장 수를 상회하며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구직자의 중·소규모 제조 및 건설 현장 기피 현상과 중견 이상 기업의 경력직 선호 현상으로 인해 구인-구직자 간 미스매치가 발생하여 안전관리자 수급의 어려움 발생
 - 국내 총 90개 대학(원)에 안전관리자로 선임이 가능한 관련 학위과정이 설치·운영 중이며¹⁰⁾, 안전관리자 선임의 기준이 되는 관련분야 자격증 응시 및 취득자 수도 2020년 이후 10% 이상의 증가율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로 '23년에는 전년대비 51.3% 증가
 - 2024 국가기술자격통계연보에 따르면 산업안전기사는 접수 인원은 전년대비 51.8% 증가한 184,760명, 산업안전산업기사는 전년대비 22.6% 증가한 86,548명으로 전체 기사·산업기사 시험 중 접수 인원 순위 1위를 차지하여, 해당 자격이 안전관리자 선임요건으로 규정됨에 따라 구직자들의 관심이 높은 것으로 파악
 - '20년 기준 국내 안전관리자 선임통계에 따르면 전체 안전관리자 선임 대상 사업장¹¹⁾은 32,189개 수준으로, '23년 기준 한 해 동안의 안전관리자 선임 가능 자격증 합격자 수가 5만 명 이상인 점을 고려하면 통계적으로는 안전관리자 공급은 충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
 - 업종별 안전관리자 선임 대상 사업장 수는 △기타 업종(14,427개) △제조업(10,958개) △건설업(6,804개) 순으로 나타났으나, 자체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사업장 비율은 △건설업(100.0%) △기타 업종(29.4%) △제조업(23.1%) 순으로 제조업 분야의 안전관리 선임 노력이 상대적으로 낮은 편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전인 2020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제조업 및 기타 업종의 안전관리자 자체 선임 비율이 낮아, 법령 개정으로 사업장 자체 선임을 위한 안전관리자 수요가 일시적으로 발생
 - 산업안전 인적자원개발위원회(2023)는 시장 내 안전관리자의 공급이 충분함에도 안전관리자 인력난이 언론에 지속적으로 보고되는 이유를 안전관리자의 법적 책임이 점진적으로 강화됨에 따라 △근로자의 안전업무 기피 △법적 책임 대비 낮은 보수 △열악한 근무환경 등의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
 - 한국산업안전보건연구원(2022)은 근로자들의 고위험·고난도 중·소규모 제조 및 건설 현장 기피로 인해 안전관리자 자격 수준과 선임 대상 사업장 수준 사이에 괴리가 존재하므로, 사업장 위험도 및 업무 수준 등에 따른 차등적인 안전관리자 수급 기준의 마련이 필요함을 언급

[표 3] 안전관리자 선임 가능 자격증 통계(최종 합격자 기준)

(단위 : 명)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산업안전지도사	187	147	168	348	318
산업안전기사	9,765	14,824	15,310	15,681	28,636
산업안전산업기사	6,485	5,473	7,728	7,886	10,746
건설안전기사	4,607	4,694	5,539	10,321	12,564
건설안전산업기사	1,194	1,104	1,514	2,299	3,027
합계	22,238	26,242	30,259	36,535	55,291

* 자료: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검정통계-종목별 현황', '산업안전지도사-자격상세정보' 참고 및 재구성

10) 산업안전 인적자원개발위원회(2023). 산업안전관리분야 NCS 내 교육훈련기관 현황 기준(NCS: 23. 환경·에너지·안전 > 06.산업안전 > 01.산업안전관리).

11) 건설업 50억 원 이상, 제조업 등 상시근로자 수 50명 이상에 해당하는 사업장.

[표 4] 2020년 기준 안전관리자 선임 통계

구분	선임 대상 사업장(개소)	위탁사업장		자체선임사업장		선임안전관리자 (명)
		개소	비중(%)	개소	비중(%)	
제조업	10,958	8,426	76.9	2,532	23.1	3,612
기타 업종	14,427	10,183	70.6	4,244	29.4	5,216
건설업	6,804	-	-	6,804	100.0	13,478
합계	32,189	18,609	57.8	13,580	42.2	22,306

* 자료 : 한국산업안전보건연구원(2022) 참고 및 재구성

* 주 : 위탁사업장 및 자체선임사업장 비중은 각 업종별 선임 대상 사업장 수를 기준으로 산출

- 정부는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에 따라 중소기업 및 산업현장의 혼란과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23년 12월 「중대재해 취약분야 기업 지원대책」을 발표하여 정책적 지원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 외에도 중소기업의 안전관리 인력 확보를 지원하기 위한 교육 등을 시행¹²⁾
 - '24년 1월 29일 고용노동부는 △공공기관 안전관리 노력 기관경영평가 지표 반영 △고위험 산업단지의 안전 통합관리 △중소제조업체 안전장비구입 바우처 지원 △공동안전관리자 지원 등 중대재해 취약분야 지원을 위한 세부 내용을 확정·추진
 - 정부는 지난 4월까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 기업(83.7만개)이 보다 손쉽게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이행할 수 있도록 신청을 통해 △안전보건 경영방침·목표 △인력·예산 △위험성평가 △안전보건관리체계 점검·평가 등 10개 핵심항목에 대해 온·오프라인으로 진단하여 결과를 제공하는 산업안전 대진단을 진행
 - 전국 30개 권역에 '산업안전 대진단 상담·지원센터' 구성·운영하여, △안전보건관리체계 △컨설팅 △교육 △기술지도 △(시설개선 등) 재정지원 등을 안전보건관리역량 확충 및 사업장 안전개선을 맞춤형으로 지원
 - "공동안전관리자 지원사업"은 인건비 부담 등으로 안전보건전문가를 채용하지 못하는 소규모 사업장을 지원하기 위해 신설된 사업으로, 지역·업종별 사업주단체가 소속 회원사의 공동 안전관리자를 채용하면 정부가 공동안전관리자 총 600명에 대한 인건비를 월 250만 원 한도로 최대 8개월까지 지원
 - 고용노동부는 중소기업 현장에 실무경험을 갖춘 안전관리 인력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건설업 및 비건설업 실무경력자들을 대상으로 안전관리자 양성교육을 실시하고, '안전보건조정자'의 선임 자격을 확대
 - 고용노동부는 '23년까지 한시적 운영 예정이었던 건설업 안전관리자 양성교육을 '25년까지 연장함과 동시에, '24년부터 비건설업 실무경력자를 대상으로 하는 안전관리자 양성교육을 실시
 - 안전관리자의 자격 범위에 공업계 고등학교 졸업 또는 공학·자연과학 분야 학위를 취득한 후 건설업을 제외한 산업에서의 실무경력이 5년 이상 있는 사람 중 안전관리자 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을 추가
 - 다수의 공종(건축, 토목, 전기 등)을 복수의 건설업체가 동시에 작업하는 경우 작업의 혼재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건설공사발주자가 선임해야 하는 '안전보건조정자'의 선임 자격을 산업안전기사 또는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건설안전 분야에서 각 5년·7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자로 확대
 - 고용노동부 추진 지원 정책은 기업의 안전관리에 도움이 되고 있으나, 이 같은 지원사업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인해 사업에 미참여하는 기업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 지원사업에 대한 적극적 홍보가 필요
 - 한국경영자총협회(2024)와 중소기업중앙회(2023)의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정부의 산재예방 및 컨설팅

12) 한국산업인력공단(2024), 기획재정부(2023.12.27), 고용노동부(2024.01.21, 2024.01.29, 2024.02.19, 2024.03.06) 등 참고.

등의 지원이 사업장 안전관리에 도움이 되고 있으며, '공동안전관리자' 선임 비용 지원사업을 활용할 계획이 있는 기업도 전체의 78.8% 수준으로 긍정적 결과

- 다만, 중소기업중앙회(2023)에 따르면 응답 기업의 49.5%가 기업의 안전관리와 관련하여 어떤 지원사업이 있는지 잘 모르겠다고 응답하여 정책에 대한 홍보의 필요성이 여전히 존재

○ 인천시의 경우 지자체 내 산업재해 가능성이 큰 산업에 대한 적극적인 안전관리 조치를 취해야 하며, 관내 기업의 정부 지원사업 참여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홍보와 함께 중앙정부 지원책의 사각지대 보완 방안 마련이 필요

- 인천시는 지역의 산업구조가 사고사망비율 및 사고재해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제조업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 기업들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지원책 마련 필요¹³⁾
 - '22년 전국사업체조사 기준 인천의 제조업 사업체는 법령 확대 적용 대상인 5인 이상 50인 미만 기업의 비율이 27.4%로 전국 24.3%보다 소폭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제조업 세부 업종 중 사고재해율¹⁴⁾이 가장 높은 '목재·나무 제품 제조업',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가구 제조업'의 산업집중도¹⁵⁾가 높은 상황
 - 최근 인천시는 안전보건지킴이를 기존 15명에서 20명으로 확대 위촉하고 관내 고위험 사업장 및 건설현장을 중심으로 점검·지도하는 등 산업재해 예방 활동을 추진 중이므로, 해당 활동을 기반으로 사고재해율이 높은 산업 부문을 대상으로 안전보건관리 현황을 진단하여 추가 지원의 필요성 파악이 요구
- 중앙정부 추진 안전관리 지원사업 정보 부족으로 인한 관내 기업의 지원사업 미참여 방지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교육 및 안전관리자 추가 교육 등 정부사업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지자체 차원의 정부 지원책 홍보 및 사각지대 보완 정책 마련이 필요
 - 지난 2월 인천시는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관련 교육 설명회를 실시한 바 있는데, 이러한 설명회 진행 시 정부 지원사업 홍보를 진행하여 관내 기업의 정부사업 참여 유도가 필요
 - 현재 인천시는 고용노동부의 '공동안전관리자 지원사업'을 통해 남동산단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공동안전관리자 배치 시범사업을 추진 중이나, 동 사업의 △소수기업 대상 △지속 여부 불분명 등 약점을 고려하여 소규모 기업들의 공동안전관리자 체계 확립·유지를 위해 지자체 및 협회·단체 차원의 지원 자원 마련이 필요
 - 서울시 사례¹⁶⁾와 같이 안전관리를 위한 법적 교육 외에 사고 예방에 필요한 추가 교육과정을 제공하는 등 정부 지원사업의 사각지대를 보완할 수 있는 정책 마련이 요구

13)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2024)의 지역별 산업재해 사고사망 현황은 △경기 △서울 △경북 △경남 △충남 △부산 △인천 순으로 높게 나타나며, 사업별로는 건설업 43.6%, 제조업 20.3%, 서비스업 17.2% 순으로 집계.

14) 한국산업안전보건연구원(2022)은 산업재해통계자료('17~'20)를 이용하여 산업별 사고재해를 계산하여 제시하고 있으며, 산업별 사고재해율은 전국 근로자 수와 사고재해 수 기준으로 산출. 사고재해율(천인율)=(사고재해수/근로자수)×1,000. 고용노동부의 산업재해 통계에 따르면 인천의 집중도가 높은 또 다른 사업인 운수 및 창고업이 속하는 운수창고통신업 분야의 경우 2024년 3월 기준 전년동기대비 재해자, 사망자 비율이 각각 23.8%, 83.9% 증가.

15) 집중도는 인천지역 종사자 수를 이용해 입지계수(LQ, location quotient) 기준으로 계산하였으며, 인천의 LQ지수가 가장 높은 산업은 운수 및 창고업(1.43), 제조업(1.21) 순.

16) 서울시는 건설현장의 재해감소를 위해 건설현장 안전관리자에게 의무로 부과되지 않는 굴착기 등 건설기계 안전교육을 실시.

제조 > 자동차산업 시장 동향



- 2024년 8월 자동차 수출액은 50.7억 달러로 역대 8월 실적 중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을 기록하였으나, 생산 및 내수는 전년동월대비 감소세가 지속¹⁷⁾
 - 8월 국내 자동차 신규 생산량은 29.0만 대로 기아 일부 자동차 생산공장의 시설공사 및 부분 파업 등이 생산량에 영향을 주어 전년동월 및 전월대비 각각 7.1%, 0.3% 감소
 - 내수판매 역시 전년동월 및 전월대비 각 1.9%, 3.2% 감소한 12.8만 대를 기록하였으나, 하이브리드차(21.5%) 및 전기차(60.0%)의 판매 증가로 친환경차의 판매량은 전년동월비 29.7% 증가한 5.1만 대를 기록
 - 2024년 8월 자동차 수출액은 지난해에 이어 역대 8월 중 두 번째로 높은 실적을 달성했으나, 수출액 및 수출 대수 모두 지난해의 기저효과로 전년동월대비 각각 4.3%, 3.5% 감소
 - 친환경차의 경우 하이브리드 차량의 수출이 전년동월대비 61.9% 증가한 38,211대를 기록하는 등 크게 증가하여 전년동월비 2.9% 증가한 54,678대를 기록
 - 자동차부품 수출액의 경우 추석 연휴 등으로 인해 지난해보다 조업일수가 적어진 영향으로 인해 전년동월비 3.5% 감소한 18.4억 달러를 기록

[표 1] 국내 자동차산업 생산, 내수판매, 수출 추이

(단위 : 대, 억\$, %)

구분	'24.01	'24.02	'24.03	'24.04	'24.05	'24.06	'24.07	'24.08
생산 (증감률)	358,423 (16.8)	300,459 (-12.5)	365,497 (-10.8)	394,457 (3.2)	372,810 (-2.4)	353,577 (-4.5)	290,910 (-17.6)	289,948 (-7.1)
내수 (증감률)	116,152 (-0.4)	115,753 (-21.3)	146,019 (-12.0)	141,110 (-5.5)	141,313 (-7.1)	137,893 (-15.2)	132,396 (-2.7)	128,199 (-1.9)
수출 (증감률)	245,255 (22.1)	198,653 (-10.9)	249,718 (-4.8)	271,147 (9.6)	254,496 (2.9)	252,360 (5.0)	199,018 (-13.4)	188,619 (-6.2)
수출액 (증감률)	62.1 (24.6)	51.6 (-7.9)	61.7 (-5.4)	67.9 (10.3)	64.9 (4.8)	62.0 (-0.4)	53.7 (-9.1)	50.7 (-4.3)
부품수출액 (증감률)	19.1 (10.8)	19.8 (-1.7)	19.1 (-7.2)	19.6 (2.9)	18.4 (-5.3)	17.6 (-11.6)	22.2 (9.5)	18.4 (-3.5)

*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월별 자동차산업 동향(2024.09.19)' 참고 및 재구성

* 주 : 최근 2개월 수치는 잠정치로 추후 변동될 수 있으며, 증감률은 전년 동월 대비로 표기

17) 산업통상자원부, '월별 자동차산업 동향(2024.09.19)'.

- **(전국)** 2024년 8월 기준 국내 자동차산업 생산지수와 수출액 모두 약세를 보이며 단기부진에 들어선 만큼, 차후 자동차산업 경기를 낙관하기 어려운 상황
 - **(생산지수)** 전국 자동차 생산지수는 전년동월대비 0.1% 감소, 전월대비 2.4% 증가한 116.5로 기준치(100)를 상회하고 있으나, '24년 6월부터 다소 감소하는 추세
 - 자동차 출하 및 재고지수는 각각 전년동월비 0.5%, 3.2% 증가하였는데, 지난 6월 이후 생산 및 출하지수가 약세를 보이는데 비해 재고지수는 꾸준히 120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경기 판단에 주의가 필요
 - **(품목별 수출액)** 국내 자동차 관련 수출액은 전년동월대비 4.1%, 전월대비 7.2% 감소한 69.0억 원으로, 대부분의 부문에서 수출액이 전년동월비 감소하며 약보합세
 - 부문별 전년동월대비 수출액 증감률은 △기타 자동차(59.4%) △승용차(-2.0%) △자동차부품(-3.6%) △화물차(-19.7%) △특장차¹⁸⁾(-52.8%) △전기차(-53.6%) 순
 - 하이브리드 차량의 수출 증가에 따라 기타 자동차 부분은 전년동월 및 전월대비 크게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외 모든 부문에서 수출액이 전월대비 감소하며 전반적인 자동차 수출 경기가 약보합세
- **(인천)** 2024년 8월 인천지역은 자동차산업 생산지수가 95.3, 수출액이 4.67억 원을 기록하는 등 전년동월대비 두 자릿수로 감소하며 자동차산업 경기가 전반적으로 부진한 상황
 - **(생산지수)** 인천의 자동차 생산지수는 전년동월대비 10.1%, 전월대비 8.0% 감소한 95.3 수준으로, '24년 들어 가장 낮은 수준을 보이는 것으로 확인
 - **(품목별 수출액)** 인천의 자동차 관련 수출액은 전년동월대비 14.7%, 전월대비 7.1% 감소한 4.6억 원 수준으로, 지난 6월 이후 2개월 연속 감소세
 - 인천시 자동차 관련 수출액은 '24년 들어 전년동월비 감소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대부분의 부문에서 전월대비 감소세를 보이며 수출경기가 둔화
 - 부문별 전년동월대비 수출액 증감률은 △기타 자동차(29.0%) △특장차(-3.8%) △화물자동차(-11.1%) △승용차(-13.0%) △자동차부품(-19.8%) △전기차(-80.1%) 순

[표 2] 국내 자동차 산업생산지수 및 증감률

지역	항목	'24.05	'24.06	'24.07 (p)	'24.08 (p)	'23.08	전월비 (%)	전년 동월비 (%)
전국	자동차 제조업	133.9	127.5	113.8	116.5	116.6	2.4	-0.1
인천	자동차 제조업	130.9	126.7	103.6	95.3	106.0	-8.0	-10.1

* 자료 : 통계청 '광업제조업동향조사 - 시도/산업별 광공업생산지수(2020=100)' 참고 및 재구성

* 주1 : 산업생산지수 파악에 활용한 항목은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반으로 구분하였으며,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C30)'의 자료를 이용

2 : 생산지수는 2020년을 기준으로 하는 원지수를 이용하였으며, 최근 2개월 수치는 잠정치로 추후 변동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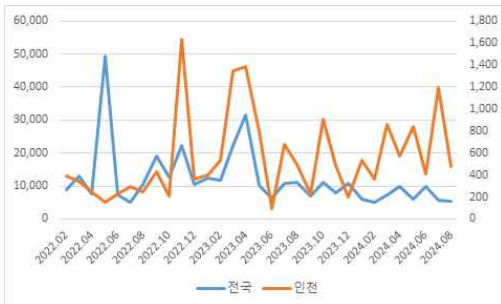
18) 특장차에는 소방차, 탱크로리, 차량운반차, 냉동탑차 등을 포함.



[승용차(MTI74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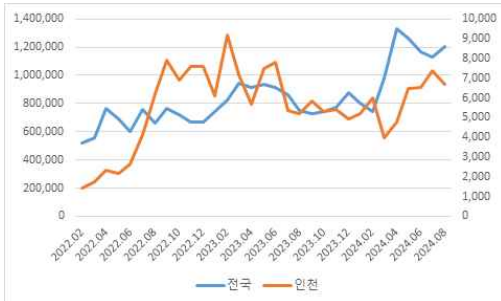
[화물자동차(MTI7412)]



[특장차(MTI7413)]



[전기차(MTI7414)]



[기타 자동차(MTI7419)]



[자동차 부품(MTI742)]

* 자료 : K-stat 무역통계 '국내 품목 수출입 통계' 자료 참고 및 재구성

* 주 1 : 수출 금액은 1,000\$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그래프 좌축은 전국 기준, 우축을 인천 기준으로 작성

2 : 2021년까지는 하이브리드 차량이 승용차로 구분되었으나, 2022년부터 해당 기종이 기타 자동차로 분류되며 전국 및 인천 지표의 변동 확대

[그림 1] 자동차 품목별 수출 동향(2024.08)

[부록] 주요 산업 경기지표(2024.08 잠정)

제조업 생산지수	전국						인천					
	생산		출하		재고		생산		출하		재고	
	지수	증감	지수	증감	지수	증감	지수	증감	지수	증감	지수	증감
반도체	134.1	8.0	114.8	5.5	153.2	-23.0	143.5	2.9	150.8	5.8	154.6	-5.7
자동차	116.5	-0.1	115.8	0.5	120.6	3.2	95.3	-10.1	87.3	-16.9	97.4	-36.0
기계장비	94.3	0.0	94.1	-0.7	132.9	-11.7	156.6	31.0	137.8	19.9	155.0	-27.3
바이오-의약	146.9	6.2	136.6	7.6	-	-	291.5	27.0	168.7	19.7	-	-
바이오-화장품	89.6	3.7	96.0	4.2	102.4	5.3	113.0	9.9	111.8	19.4	103.1	-13.7
건설 수주액 (억원, %)	전국				인천							
	공공		민간		공공		민간					
	금액	증감	금액	증감	금액	증감	금액	증감				
건설	13,399	-29.9	67,941	7.5	605	-62.2	15,169	886.6				

* 자료 : 통계청 '광업제조업동향조사' 및 '건설경기동향조사'의 산업별 통계 참고 및 재구성

* 주 1 : 각 산업의 통계 원자료 참고 시 항목명은 순서대로 △전자 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화학 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 △건설수주 등

2 : 생산지수는 2020년 기준 원지수를, 건설수주액은 종합건설업체의 건설수주액 경상이가격을 이용해 작성되었으며, 각 지표의 증감은 전년 동월 대비 비율로 표기

3 : 각 자료는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

금융

『금융상품 한눈에』 사이트, 개인사업자 대출상품 비교 시작 예정



#금융위원회

- 금융위원회는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른 금융감독원 비교공시 대상 금융상품에 '개인사업자 대출상품'을 추가하여, 오는 12월부터 '금융상품 한눈에' 사이트에서 개인사업자 대출상품 비교 서비스를 개시할 계획
 - '금융상품 한눈에'는 금융소비자의 비용부담 경감과 합리적 선택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웹사이트로, 현재 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 △개인신용대출 상품에 대한 비교공시 서비스를 제공 중
 - 금융위는 가입대상 업종이나 대출목적 등 상품별 특성이 다양하여 비교가 어려운 개인사업자 대출 상품을 비교공시 대상 상품으로 추가하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세칙」 개정을 통해 금융소비자의 편의성을 증대할 계획
 - 이를 위해 금융위는 시행세칙 개정안에 개인사업자 대출 비교공시에 반영해야 하는 △자금융도 △대출 상환방식 △중도상환수수료 등 공시 항목 및 항목별 기준을 마련
 - 시행세칙 개정안은 오는 10월 13일까지 사전예고 진행 후 12월 초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개인사업자 대출상품 비교공시는 오는 12월 말 개시 예정
 - 금융위는 금번 법령 개정 및 비교공시 서비스 확대를 통해 개인사업자의 합리적 선택이 가능해지고, 상품간 비교에 따른 건전한 시장 경쟁 촉진으로 금융서비스 개선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

노동

10월 7일부터 2주간,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신청·접수



#고용노동부

- 고용노동부는 오는 10월 18일까지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를 통해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E-9)'에 대한 올해 4회차 신규 고용허가를 신청·접수받을 계획
 - 금번 고용허가 규모는 전체 33,803명으로, △제조업(20,134명) △서비스업(5,058명) △농축산업(3,648명) △어업(2,249명) △건설업(1,414명) △조선업(1,300명) 등 6개 분야를 대상
 - 특히 고용노동부는 금번 신청 일정에 맞춰 '24년 10월부터 임업의 계절적 특성을 반영한 '임업 근무처 추가제도*'를 시행하여 사업주의 고용부담 경감과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안정 향상을 지원할 계획
 - * 동 제도는 임업 분야의 외국인근로자가 ①동일 사업주 임업 분야 내 다른 사업의 직무를 추가 수행하거나 ②원사업장과의 근로계약을 유지하며 일정기간 다른 사업주와 근로계약을 체결해 근무하는 제도를 의미
 - 외국인근로자(E-9) 고용을 희망하는 사업주는 7일 간의 내국인 구인노력을 거친 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방문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고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결과는 오는 11월 4일(월) 발표 예정

#국무조정실

- 지난 9월 24일, 탄소중립 분야 혁신기술 보유 스타트업을 발굴·육성하기 위한 정부의 범국가 탄소중립 프로젝트인 「넷제로 챌린지X」가 출범하여 '24년 12월 통합공고를 시작할 계획
 - 「넷제로 챌린지X」는 탄소중립·녹색성장 분야의 혁신기술을 보유한 스타트업을 발굴하고, 혁신적 기후기술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특전을 제공하여 국가 탄소중립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젝트
 - 동 프로젝트는 탄핵위, 관계부처, 기업, 유관기관 등이 협력·추진하며, 창업보육·투자 프로그램 보유 기관이 직접 선발·지원(Tier1)하거나 Tier1에서 선발된 스타트업에 대한 추가보육(Tier2) 및 공통 간접지원(Tier3)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
 - 지원은 「넷제로 챌린지X」라는 통합프레임워크 하에서 추진하되 기관별 세부 기준에 따라 평가·선발이 진행되며, 예비창업자·창업기업 대상의 스타트업 육성 '퍼스트업' 트랙과 투자 지원을 통한 '스케일업' 트랙이 운영

Tier	주요 활동	참여기관
1	스타트업 직접 선정 및 보육·투자 등 창업 사업화 지원	(보육) 과학기술사업화진흥원,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한국환경산업기술원, LG사이언스파크, SK텔레콤, 특허청 (투자) 소풍벤처스, 아이엠투자파트너스, 에스제이투자파트너스, 에이스톤벤처스, 인비저닝파트너스, 인프라프론티어자산운용
2	창업패키지, 입주공간 등 추가 보육	신용보증기금, 아산나눔재단, 창업진흥원, 현대차 정몽구 재단
3	규제샌드박스, 녹색금융, 보증 등 공통 간접 지원	기술보증기금, 대한상공회의소, 신용보증기금, 신한은행, 은행권청년창업재단, 한국벤처투자, 한국산업은행, 한국성장금융, 한국환경공단, 과기정통부, 환경부, 중기부, 금융위, 조달청, 특허청

#국토교통부

- 국토교통부는 청약통장 보유 국민이 보다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개선된 제도를 본격 시행할 계획
 - 지난 9월 23일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금리를 기존 2.0~2.8%에서 2.3~3.1%로 0.3%p 인상한데 이어, 10월부터는 민영·공공주택 중 한가지 유형만 청약할 수 있었던 기존의 청약 예·부금 및 청약저축의 주택청약종합저축 전환을 가능하도록 개선할 예정
 - 종합저축으로의 전환은 종전 해당 통장 가입 은행 또는 타행 은행(11월~)을 통해 가능하며, 전환 시 △모든 주택청약 허용 △높은 금리 △소득공제 혜택 △배우자 통장 보유기간 합산 등 종합저축의 모든 혜택을 수혜 가능
 - 또한 오는 11월부터는 확대된 청약통장 소득공제 한도(300만 원)에 따라 월 납입 인정액을 25만 원까지 상향하며, '25년부터는 청약통장의 소득공제 및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무주택 세대주의 배우자까지 확대할 계획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는 9월 26일부터 개인 의료데이터 국가 중계플랫폼인 『나의건강기록』 앱(App)의 기능을 대폭 개선하여, △14세 미만 자녀 건강기록 열람 △약물 알레르기 확인 △복약알림 등 서비스 제공 범위를 확대
 - 『나의건강기록』 앱은 의료소비자 본인의 인증 및 동의를 거쳐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질병관리청 등 공공기관과 상급종합병원을 포함한 의료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투약·진료·건강검진·예방접종·수술내역 등 개인의 의료정보를 편리하고 안전하게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데이터 국가 중계플랫폼
 - 금번 앱 서비스 개선을 통해 앞으로는 △14세 미만 자녀 건강기록 확인 △약물 알레르기 확인 △복약알림 등 신규 기능이 제공될 예정이며, 정보 연계 의료기관도 총 1,004개(상급종합병원 16개 포함) 기관으로 확대
 - 자녀 건강기록 확인은 앱에 주민등록상 부모와 동일한 거주지에 있는 14세 미만 자녀를 등록하여 의료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로, 본인인증이 곤란한 영유아 자녀를 둔 부모가 유아수첩을 지참하지 않고도 자녀 진료 및 응급상황에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또한 복지부는 금번 서비스 개선 시 △앱 디자인 개선 △생체인증 로그인 수단 추가 등 『나의건강기록』 앱의 편의성 향상을 위한 개선도 함께 진행하였으며, '25년까지 전국 47개 상급종합병원과 연계하여 더욱 많은 의료정보를 제공할 계획

#보건복지부

- 지난 9월 말 보건복지부는 '24년 제1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임신 중 당뇨병 환자 연속혈당측정기 지원방안' 및 '난임시술(보조생식술) 급여기준 개선방안'을 심의·의결하였으며, 향후 임신·출산을 위한 건강보험 지원을 강화할 계획
 - 복지부는 '24년 11월부터 임신 중 당뇨병 환자가 적절한 혈당관리를 통해 건강한 아이를 출산할 수 있도록, 혈당 수치를 실시간 제공하는 연속혈당측정기를 신규 지원할 계획
 - 그간 책정의 인술린 미분비로 반드시 인술린 투여가 필요한 1형 당뇨병환자에게만 지원되던 연속혈당측정기의 지원 대상을 임신 중 당뇨병 환자로 확대하여 출산예정일로부터 15일까지 지원하며, 지원 기준 금액은 1형 당뇨병환자와 동일한 1일 당 1만 원(공단부담률 70%) 수준으로 책정
 - 또한 11월부터는 난임시술 지원을 부부당 25회에서 출산당 25회로 변경하고, 초혼 및 초산 연령 증가에 따라 난임시술 본인부담률을 나이에 관계없이 일괄 30%까지 하향 조정
 - 이 외에도 '25년부터는 자연분만, 제왕절개 등 분만방법에 관계없이 출산에 대한 본인 부담을 면제하는 등 앞으로도 임신·출산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

#보건복지부

- 지난 9월 27일 보건복지부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 추진방안을 발표하고, 10월 2일부터 12월 말까지 동 사업 참여기관 신청 접수를 진행할 계획
- 복지부는 상급종합병원이 “중환자 중심 병원”으로서 기능을 확립하고 전공의의 밀도있는 수련을 제공하기 위해 건강보험 재정을 통해 3년간 총 10조 원을 지원할 예정
 -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 주요 지원 내용

구분	주요 내용	지원 금액(연간)
입원료 수가 인상	• 2~4인실, +7.5만 원 가산	2,100억 원
중환자실 등 인상	• 중환자실 +30만 원, 특수병실+10~20만 원	4,600억 원
중증수술	• 상종 다빈도 중증수술(910개) 50% 인상	3,500억 원
응급진료 및 수술	•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 응급센터 내원 후 24시간 중증응급수술 가산	1,500억 원
24시간 진료 지원	• 24시간 진료 기능유지 정책수가	7,300억 원
전문의 진료 정책수가	• 중환자실 및 입원환자 관리 전담 전문의 가산 (중환자실 5만 원, 입원실 2.5만 원)	3,000억 원
의뢰회송 수가개선	• 전문적 의뢰·회송에 대해서는 의뢰회송 수가 가산 등	1,000억 원
성과 평가(안)	• 병상 감축 지원(3,400억 원) : 병상당 입원진료비*감축병상의 30% • 적합질환 비중, 진료협력체계 구축 실적에 따른 성과보상(6,600억 원)	1조 원 + α

#환경부

- 지난 9월 30일 환경부는 탄소중립포인트제 가입자의 편의성 증대와 신규가입자 확대를 위해 전용 모바일 앱인 '카본페이(Carbon Pay)'를 출시
- '카본페이'는 에너지·자동차·녹색생활실천 등 분야별 홈페이지로 구분되어 있던 웹 기반의 회원가입 절차와 접근성을 개편하여 탄소중립포인트제 관련 통합 앱을 구축한 것으로, 스마트폰의 구글 플레이스토어 및 애플 앱스토어에서 다운로드를 통해 이용 가능
- 동 앱의 주요 기능은 △통합 회원가입 △간편 로그인 △간편 실적조회 △포인트 매장 찾기 등으로, 에너지 사용량(kWh), 주행거리(Km), 실천수(건) 등 사용자의 제도별 참여실적 조회 서비스를 제공하고 제도 참여를 위한 편의성을 개선
 - 자동차 분야의 경우 주행거리·계기판(사진) 등을 활용하여 참여실적 자료 제출이 가능해질 예정이며, 특히 '텀블러·다화용컴' 및 '리필스테이션' 항목은 제도 참여자가 '카본페이' 실행 후 '나의 QR 인증(QR코드)'을 통해 탄소중립포인트제 회원가입 이외 참여 매장·기업에 대한 별도 회원가입 없이 포인트를 수집 가능

참고 자료

- 대한산업안전협회, 「안전교육교안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의 이해」, 2022.01.19.
- 한국산업안전보건연구원, 「사업장 안전관리 제도 개편 및 종합건설팅기관 육성 방안」, 2023.11.
- 고용노동부, 「중대재해처벌법 주요내용(2021.1.26. 공포)」, 2021.06.20.
- 법무법인 광장,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 및 시사점, NEWSLETTER, 2024.02.
-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 중대재해처벌법 평가 및 안전관리 실태조사」, 2023.05.
- 건설산업연구원, 「건설업 안전관리자 수요 증가에 따른 안정적인 수급 확보 방안」, 건설이슈포커스, 2022.04.
- 산업안전 인적자원개발위원회(ISC), 「안전관리자의 전공, 자격, 경력이 노동시장에서 가지는 효용성 분석」, 이슈리포트, 2023.07.14.
-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검정통계-종목별 현황(24.09.05 기준)」.
-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산업안전지도사, 「자격상세정보(24.09.05 기준)」.
- 고용노동부·한국산업인력공단, 「2024 국가기술자격통계연보」, 2024.06.27.
- 한국산업안전보건연구원, 「안전관리자 자격기준 강화 방안 마련」, 2022.10.31.
- 한국경영자총협회, 「50인(억) 미만 소규모 기업 중대재해처벌법 준수 현황 실태조사」, 2024.05.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눈에 보는 산업재해 사고사망 현황 인포그래픽」, 2024.06.21.
- 고용노동부, 「2022 산업재해현황분석(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재해를 중심으로)」, 2023.12.
- 이민형,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사업장도 시작이다」, 대한건설보건학회지 제5권 제2호, 2023.12.
- 한국산업인력공단, 「HRD 동향 2024 2월호」, 2024.02.
- 기획재정부, 「40인 미만 중대재해 취약기업 획기적 지원한다」, 2023.12.27.
- 고용노동부, 「중대재해처벌법 전면 시행, 사상 최초의 산업안전 대진단으로 총력 지원한다!」, 2024.01.29.
- 고용노동부, 「소규모 사업장, 공동으로 안전관리체계구축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4.02.19.
- 고용노동부, 「현장 경력자 대상 중소기업 안전관리자 양성교육 올해도 신청하세요」, 2024.01.21.
- 고용노동부, 「안전관리자와 안전보건조정자 자격이 확대됩니다」, 2024.03.06.
- 한국산업안전보건연구원, 「안전관리자 등 선임기준 강화에 관한 연구」, 2021.12.
- 고용노동부, 「2024.3월말 산업재해현황」, 2024.05.31.
- 인천광역시, 「인천시,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 대응 강화」, 2024.04.18
- 산업통상자원부, 「월별 자동차산업 동향(매월호)」.
- 국가통계포털(KOSIS), 「광업제조업 동향조사」 및 「건설경기동향조사」.
- K-stat 무역통계, 「국내 품목별 수출입 통계」 및 「국내 지역별 수출입 통계」.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개인사업자 대출상품도 한눈에…비교공시 서비스 추진」, 금융위원회, 2024.09.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4회차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신청 접수…10월 7일부터」, 고용노동부, 2024.09.24.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탄소중립 스타트업 발굴 프로젝트 ‘넷제로 챌린지X 출범」, 국무조정실, 2024.09.24.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청약통장 더 쓸쓸해진다…금리 최고 3.1%로 인상”, 국토교통부, 2024.09.25.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자녀 건강기록 열람까지…더 똑똑해진 ‘나의건강기록’ 앱”, 보건복지부, 2024.09.26.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난임시술 본인부담률 30%로 인하…제왕절개 본인부담 면제”, 보건복지부, 2024.09.27.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내달부터 상급종합병원 본격 구조전환…3년간 10조 원 건보재정 투입”, 보건복지부, 2024.09.27.
- 보건복지부, “10월부터 상급종합병원 본격적 구조 전환, 중증수술·마취행위 910여 개 시작으로 저수가 조정 착수”, 2024.09.27.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탄소중립포인트제 전용 앱 출시…회원가입 없이 포인트 적립”, 환경부, 2024.09.30.

인천 경제산업 ISSUE&TREND

제24-19호(2024.10.11)

발행처 인천연구원
발행일 2024년 10월 11일
주소 (22711) 인천광역시 서구 심곡로 98
전화 032-260-2600
홈페이지 www.ii.re.kr

본 리포트의 내용은 연구진의 의견으로 연구원의 공식입장이 아닙니다.
본 리포트의 저작권은 인천연구원에 귀속되며, 원고의 무단전재, 복제, 배포 등
저작권 전반에 관한 침해 행위를 금합니다.